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동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10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 19.

발 의 자 : 정동만 · 정희용 · 박성민
구자근 · 이상휘 · 조승환
김태호 · 최은석 · 엄태영
이인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중앙부처 공무원의 거주시설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훈령인 「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」에서 공과금 등을 거주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 비하여,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거주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여부 및 범위를 정하고 있어 형평성이나 통일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거주용 행정재산에 대한 비용부담 규정을 신설하여 각종 요금 등 거주에 필요한 비용은 거주자인 공무원 등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거주용 행정재산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3조의2 신설).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3조의2(거주용 행정재산에 대한 비용부담) ① 거주용 행정재산이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- ② 전기·수도·통신요금 등과 소모성 비품의 교체 비용 등 거주에 드는 비용은 거주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부담한다.
- ③ 그 밖에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83조의2(거주용 행정재산에 대한 비용부담) ① 거주용 행정재산이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</u></p> <p><u>② 전기·수도·통신요금 등과 소모성 비품의 교체 비용 등 거주에 드는 비용은 거주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부담한다.</u></p> <p><u>③ 그 밖에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.</u></p>